



제 5 장

기사 노출 · 검색 차단 사례

제 5 장

기사 노출 · 검색 차단 사례

사례. 22

신청인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교비횡령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7서울조정121 정정청구
신 청 인	정○○
피신청인	주식회사 크리스천투데이(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중 재 부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2017. 1. 19.
처리결과	조정성립(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사기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신청인이 교비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심리 결과 조정대상 기사의 노출 및 검색 차단 조치를 하기로 양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 『사기 혐의 구속된 ○○○○○○○스쿨 정○○ 목사, 교비 횡령 의혹도』(인터넷 크리스천 투데이 2016년 12월 8일자 교육면)

■ 내 용

정 목사는 김모 권사로부터 32억 원을 차용했으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그는 학교 운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기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됐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구속 전 정 목사는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음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목사 부인인 ○○○○○○스쿨 총감은 “정 목사가 구속되기까지 최대의 실수는 차용증을 써준 것이고, 채권자가 고소를 한 것은 제대로 예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 목사 성격이 강직해서 채권자라도 비굴하게 굽신거리지 않다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한 학부모에 따르면 정 목사의 부인은 정 목사가 법정구속돼 매우 억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목사 구속 후 부인인 학교 총감은 학부모들에게 “자신은 돈도 없고 학교에 대해 자세한 것은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면서, 학부모들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정 목사는 학교 경영권을 개인과 단체를 통해 넘기려 했으나 번번히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다. 또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학부모들을 속였으며, 심지어 자신을 학부모들에게 자신을 대표로 하여 조합을 구성해 5억 원을 마련해달라는 부탁도 했다고 한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극심한 재정난에 빠졌고, 외국인 교사들에게 체류 비자를 합법적으로 제공해 줄 수도 없어 그들의 신분도 불안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교사들이 비자를 받으려면 평생교육원 또는 어학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는데 이 학교는 평생교육 시설로만 등록돼 있었고, 이마저 2015년 8월 정 목사가 직접 폐업신고를 하고 학교를 운영, 외국인 교사들에 대해 탈세와 불법 체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당시 학부모들은 개강 이틀 전에도 교사 총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학교 측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부인했다고 한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교사들은 6개월에서 1년씩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정

목사는 오히려 직원들을 대상으로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고 일부만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회사와의 관계… 모든 금전적 문제는 수탁회사 대표에게 요구하라?

○○○○○○스쿨이 자리한 건물은 ○○○대학교의 소유로, 한 수탁회사가 관리 운영중이다. 학교는 자금난에 빠진 후 지난 2년 6개월간 관리비 등 18억 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정 목사 변호인은 ‘법정진술자료’라는 것을 가져와 정 목사와 수탁회사 대표 A씨가 학교의 동업자이므로 모든 금전적 문제는 A씨에게 요구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8억 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에서 A씨는 2015년 가을학기에 폐교할 것을 요청했으나, 정 목사의 부탁으로 2016년 6월까지만 운영할 것을 허락했다. 이후에는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학생들을 모집하지 말고 최소 폐교 2개월 전 학부모들에게 알리라고 했다. 정 목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으나, 학부모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가을학기 학비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학기 전 학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학기 초에는 학교에 돈이 있기 마련인데도 급식과 스쿨버스 운영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총감에게 ‘돈을 어디에 다 썼느냐’고 물었더니 ‘밀린 빚도 갚고 여기저기 썼다’고 하더라”며 “학비를 학교 운영에 제대로 썼는지 경찰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학부모들은 변호인을 선임해 정○○ 목사에게 대해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크리스천투데이(<http://www.christiantoday.co.kr>)의 홈페이지 교육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이 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사기 혐의 구속된 ○○○○○○○스쿨 정○○ 목사’ 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 신문(크리스천투데이)은 지난 12월 8일자 교육면에 ‘○○○○○○○○스쿨 사기 혐의로 구속된 ○○○○○○○스쿨 정○○ 목사, 교비 횡령 의혹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기사내용과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으며 정○○ 씨는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항소중인 사안에 대해 사실여부가 부정확한 내용을 실명과 함께 거론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1. 피신청인은 2017년 2월 8일까지(단, 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
가. 크리스천투데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다.
나.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가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2. 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례. 23

남이섬의 매입과 개발이 설립자 조부의 친일 재산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7서울조정1370 · 1371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남이섬
피신청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인사이트)
중 재 부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2017. 8. 8.
처리결과	조정성립(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춘천 근교의 대표적 휴양지 남이섬의 소유주가 친일파의 후손이고, 남이섬이 친일 재산과 연관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남이섬의 설립자는 친일파인 조부의 친일 재산과 무관하게 본인의 퇴직금 등 사재로 남이섬을 구입한 것이며, 설립자와 그 부친은 어떠한 친일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남이섬이 친일재산과 연관돼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은 남이섬의 설립자를 친일파라고 언급한 것은 아니므로 정정보도는 어려우나 기사 삭제 조치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신청인 측도 이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원만히 화해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 『연인들의 여행지 ‘남이섬’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진실』 제하의 기사 (인사이트 2017년 7월 29일자 홈페이지)

■ 내 용

휴가철을 맞아 남이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남이섬의 역사적 배경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남이섬의 소유주가 친일파 ○○○의 후손이란 내용의 게시물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춘천 근교의 대표적 휴양지 남이섬은 친일파 ○○○의 손자 ○○○ 한국은행 초대 총재가 퇴직 후 구입한 땅으로 1966년 경춘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법인화됐다.

이후 1994년 ○○○ 증손자이자 ○○○의 아들 ○○○가 회사 명의를 ‘주식회사 남이섬’으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전문경영인이 남이섬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대 지분은 여전히 ○씨 일가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 일가는 남이섬이 ○○○의 ‘퇴직금’으로 매입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문제는 ○○○의 재산 대부분이 친일파 ○○○에게 물려받았다는 점이다.

명성황후의 친척이자 조선 말기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는 1910년 한일 병탄 조약 후 일제에 조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총독부로부터 작위를 받았다.

○○○의 후손들은 현재 남이섬을 비롯해 한국에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재산은 ○○○가 일본을 등에 업고 부정축재한 재산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 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참여정부 당시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남이섬을 국가에 귀속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친일재산이라도 법인화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될 수 없다는 내용의 관련법 조항으로 인해 실패에 그쳤다.

현재 남이섬은 연간 매출액 300억원이 넘는 ‘국민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남이섬이 친일 재산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인사이트(<http://www.insight.co.kr>)의 홈페이지 이슈면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이 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남이섬이 친일 재산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2.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29일자 홈페이지 이슈면에 “연인들의 여행지 ‘남이섬’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남이섬 소유주가 친일파의 후손이며, 남이섬이 친일 재산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남이섬을 매입하고 설립한 ○○○씨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가 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음은 물론 진보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 함세웅 신부)에서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씨의 부친 ○○○ 또한 어떠한 친일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남이섬이 친일 재산에 연관되어 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 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및 2016. 10. 1.자 “남이섬, 알고 보니 ‘친일파’ 민영휘 후손 재산” 제목의 기사를 인사이트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노출 및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나. 인사이트 2017. 6. 7.자 “‘친일파’ ○○○ 무덤 관리 가옥을 문화재로 등록한 강원도” 제목의 기사 중,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재산은 유명 관광지 ‘남이섬’으로 남이섬은 친일파 ○○○의 손자 ○○○ 전 한국은행 초대 총재가 퇴직한 후 구입한 땅으로 경춘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1966년)하면서 법인화됐다. 1994년 ○○○의 증손자 이자 ○○○의 아들 ○○○가 회사 명의를 ‘주식회사 남이섬’으로 변경하면서 대표 이사를 지냈고, 현재는 전문경영인이 남이섬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대 지분은 ○씨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부분을 삭제한다.
 - 다.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가호 및 나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한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해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8. 23.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례. 24

영화감독의 여배우 폭행 및 베드신 강요 피소사건과 관련하여 해당영화의 PD였던 신청인이 SNS에 올린 글을 동의 없이 실명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7서울조정1405 손배청구
신 청 인	홍○○
피신청인	주식회사 스타뉴스
중 재 부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2017. 8. 11.
처리결과	취하(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영화 PD인 신청인이 영화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영화감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SNS에 공개대상을 '친구'로 제한하여 올린 지극히 개인적, 주관적 글을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실명으로 인용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1,000,000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한편 해당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조정신청 건(인터넷 스포츠조선)에 대해 중재부는 손해배상 2,000,000원 및 기사노출·검색을 차단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바 있으며, 이 건을 포함하여 최초 보도를 전제한 매체들에 대한 조정신청의 경우 피신청인들이 조정심리 전 기사노출·검색 차단 조치를 하여 신청인이 전부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 PD, 김○○ 감독 피소 심경..“가해자 만드는 쉬운 세상”』 제하의 기사 (스타뉴스 2017년 8월 4일자 엔터테인먼트/영화면)

■ 내 용

영화 ‘○○○○’의 프로듀서가 영화 촬영장에서 여배우 A씨 폭행 및 베드신 촬영 강요를 한 혐의로 피소된 김○○ 감독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 홍○○ 프로듀서(PD)는 4일 오전 자신의 SNS에 A씨의 김○○ 감독 고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털어놓았다.

홍 PD는 “4년도 넘은 일이라 기억에서도 자유롭지 않음이 유감이지만 나와 스태프들의 귀는 달혀서 들리지 않았던 폭언이 그녀에게만 들렸던 것인지”라며 “나와 스태프들에게는 보이고 인지되어 사전헌팅까지 마무리됐던 장면이 그녀에게만 보이지 않아 강요된 것인지 아주 혼란스러운 날이었다”고 밝히면서 지난 3일 알려진 A씨의 김○○ 감독 고소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내가 기억하는 건 여주인공이 시작하자마자 돌연 잠적하여 못하겠다고 하고. 우린 영화가 혹 엮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잠을 설치고. 1인2역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에 잠설친 아침부터 영등포건 노랑진이건 가발을 찾아 헤매던 기억”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폭행이 이뤄졌다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지 않아 대꾸가 소심해지는 것이 역을 하다면서도 속상하고 화가 올랐다고 했다.

홍○○ PD는 “당했다. 하고 말만 꺼내면. 다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로 만드는 쉬운 세상이구나. 우리 스태프들은 폭행방조자였던가”라며 “막 가지 말자, 정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영화계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개봉한 ‘○○○○’에서 엄마 역할에 캐스팅된 후 하차했다. 그녀는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올 초 이와 관련한 일을 영화인신문고에 접수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감독 측은 지난 3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 일부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 감독은 A씨와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냈고, ‘○○○○’ 촬영을 약 2회 하고 일방적으로 출연을 포기,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이에 수차례 현장에 나올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현장에 오지 않았고, 출연 중인 다른 배우를 1인 2역으로 급하게 시나리오를 수정해 촬영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연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서 4년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안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으며,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취하

조정신청 후 이행결과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례. 25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손님들을 몰래 촬영하고 SNS에 올린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인 신청인의 모습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7서울조정1589 손배청구
신 청 인	노○○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온라인 중앙일보)
중 재 부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2017. 8. 30.
처리결과	취하(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제주도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상습적으로 손님들을 도둑 촬영, SNS 계정에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면서 해당 SNS에 올라온 여성들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사진을 보도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고, 얼굴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되어 헤어스타일, 의상, 나머지 신체가 전부 노출되어 주변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며, 성희롱하는 댓글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며 손해배상 50,000,000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피신청인은 조정 기일 이전에 해당기사의 노출 및 검색 차단 조치를 했고, 신청인은 조정 신청을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1

■ 『제주 카페 알바생 ‘손님 도촬’ 논란』 제하의 기사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8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제주 협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상습적으로 도둑 촬영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오후 2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주의 한 카페 알바생이 지속해서 손님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올려온 사실이 알려졌다.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사진들은 특히 여성 손님들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다. 트위터엔 사진과 함께 감상도 적혀 있는데, 사진을 찍힌 당사자가 보면 인격적으로 모욕감이 들만한 내용도 적혀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트위터 계정은 황급히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이후 알바생은 이날 오후 2시 41분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무슨 용도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많은 분, 특별히 여성분들께 불쾌함을 유발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민사·형사적 책임을 지겠으며, 직장의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2시 48분경에 다시 “모든 피해자분과 저로 인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신 매장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든 사진은 삭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께 피해를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이후 2시 50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는 제 개인적인 일탈/불법행위였습니다.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해당 가게의 점주와 통화 결과, 점주는 “트위터를 하지 않으며,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점주 역시 오후 2시경 지인의 연락을 받고 문제의 사진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점주는 “즉시 해당 알바생에게 전화로 최대한 빨리 문제가 된 사진들을 계정에서 내릴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점주에 따르면 해당 알바생은 열흘 정도 전에 퇴사했다고 한다. 점주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대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정대상보도2

- 『[카드뉴스]손님들 도촬한 제주 카페 알바생』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8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제주 협재의 유명 카페 알바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입니다.

여성의 몸을 몰래 적나라하게 담았고 감상평과 함께 얼굴까지 공개했습니다.

섹시하다며 말을 걸고 싶다고 하기도 했고 여성의 뒷모습을 보며 음흉한 취향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이게 도촬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문제가 되자 그는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과의 뜻과 함께 민형사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카페 점주에 따르면 이 알바생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열흘 전쯤 퇴사했다고 합니다.

예쁜 제주 카페의 즐거웠던 경험을 소름끼치게 만드는 ‘도촬’ 알바생 무서워서 어디 가겠나요.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취하

조정신청 후 이행결과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